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 출제영역분석

총론	9	재무행정론	6
정책론	9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6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6	지방자치론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38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3	1	5	12	—	5	4

| 말 바꾸기 |

01

다음 중 제3섹터(중간조직)의 형성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실패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② 관청형성모형은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을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③ 공공재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 ④ 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이다.

【해설】 ② [X]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이론이다. 관청형성모형에서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집행기능을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관청형성)으로 떼어내고 가능한 권력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참모적 기능수행을 선호한다. 즉, 관청형성모형은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을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summary | 비정부조직의 형성배경

공공재이론 (정부실패이론)	기존의 공공재 공급구조체제(정부)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NGO 부문 등이 등장(정부실패의 해소)
계약실패이론 (시장실패이론)	거래비용이론에 근거. 서비스가 구매되는 상황이나 또는 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NGO가 등장, 비영리성을 가진 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더욱 신뢰함.
소비자 통제이론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인 국가권력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GO가 등장
다원화이론	사회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정부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될 수 있음. NGO 부문 등은 이러한 공적 서비스의 다원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
기업가이론	정부와 NGO 부문이 이질적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가정하는 기업가적 관점의 이론
보조금이론	NGO 부문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발생·유지된다는 이론
상호의존이론	NGO 부문과 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로 상정하는 이론

▶ 올바른 지문

② 관청형성모형은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을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 139

▶ ②

| 제도 및 이론비교 |

0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독점성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②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배경으로 수행된다.
- ③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성을 갖는다.
- ④ 행정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해설】 ③ [X]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관리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행정과 경영은 공통적으로 능률주의를 지향한다.

summary | 행정과 경영

구 분	행 정	경 영
목 적	• 공익 추구 • 국가의 생존과 경제·사회발전 책임 • 정의와 형평 등의 사회가치 비중 큼.	• 이윤극대화
법적 규제	• 엄격한 법적 규제(행정의 경직성)	• 직접적인 법적 규제 적용 안 됨.
정치권력적 성격	•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기능 수행 •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의 통제	• 정치로부터 분리 • 강제력과 권력 수단 없음.
평등성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고객 간 차별 대우 용인
독점성	• 경쟁자 없는 독점성 •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자유로운 시장 진입 ⇨ 경쟁관계 • 고객지향적 제품 서비스
관할 및 영향범위	• 모든 국민이 대상	• 고객 관계 범위 내에 한정
성과의 척도	• 명확한 단일의 척도가 없음. ⇨ 비능률성이 커지기 쉬움.	• 이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4

▶ ③

| 짚기기 |

03 다음 중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자연적 독점 - 공적유도, 공적규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유도, 공적규제
- ③ 외부효과 발생 - 공적유도, 공적규제
- ④ 불완전 경쟁 - 공적규제

【해설】 ① [×] 자연적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에는 공적공급과 정부규제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응해야 한다.

summary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대응

구 분	공적 공급(행정조직)	공적 유도(보조금)	정부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 올바른 지문

- ① 자연적 독점 - 공적공급, 공적규제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

▶ ①

04

시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 ① 파레토 최적 ② 코즈의 정리
 - ③ 파킨스 법칙 ④ 니스카넨의 가설

【해설】 ① [X]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며,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최적의 자원배분이 실현되어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효용감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O] 코즈의 정리는 개인 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완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이론이다. 즉, 거래비용이 적고 각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히 제도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음)하다는 이론이다.

③ **[X]**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가 실제 행정의 업무량과 직접적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④ **[X]** 니스카넨의 가설은 관료들이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보다는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3, 72, 147, 239

► ②

| 말 바꾸기 + 개념 |

05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 ② 성과규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 ③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 ④ 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해설】 ① [O]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② [O] 성과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③ **【O】**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리규제는 성과 달성 정도를 정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④ [X] 관리규제는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이 높아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④ 관리규제에서는 수단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1

▶ ④

06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공익이 강조되었다.
- ②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 ③ 과정설은 공익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 ④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설】 ④ [X] 민주화의 과정에서 집단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힘센 소수의 몇몇 집단이 공익의 형성과정을 주도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약자의 이익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며,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공익의 실체설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summary | 실체설 VS 과정설

구 분	실체설	과정설
공 익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존재 (유기체·공동체적 관점, 집단주의적 성격) ⇒ 엘리트나 관료에 의해 실체가 규정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자유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시각) ⇒ 과정·제도·절차적 국면을 통해 형성
관 료	공익의 규정과 목민적 역할	사익 간 갈등의 조정자적 역할
장 점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의 도출을 중시
한 계	공익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공익형성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과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조직화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설명력	국가의 힘이 강력한 개도국	민주적 의견수렴절차가 발달한 선진국
관 점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다원주의, 점증모형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1~93

▶ ④

07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 ① 분할의 오류
- ② 표본추출 오류
- ③ 합성의 오류
- ④ 통계적 회귀 오류

【해설】 ① [X] 분할의 오류(생태론적 오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그 부분이나 구성요소에 적용하면 옳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사회의 부패를 분석하여 개별 공무원의 행태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③ [O] 합성의 오류란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행태를 분석하여 공무원 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10

▶ ③

08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창출을 중시한다.
- ② 기업가적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 ④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 【해설】 ① [O] 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시한다(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 ② [X] 기업가적 정부는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촉진적 정부 - 노젓기보다 방향 잡아주기).
- ③ [O] 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사명 지향적 정부 - 규칙 중심 조직의 개혁)
- ④ [O] 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분권적 정부 -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 올바른 지문

② 기업가적 정부는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57

▶ ②

09 현상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 | |
|---------------------|---------------|
| 가. 인본주의 | 나. 가치와 사실의 구분 |
| 다. 상호주관성 중시 | 라. 순수과학적 연구 |
| 마. 철학적 연구방법 | 바. 재정치행정이원론 |
| 사. 반실증주의 | 아. 능동적·사회적 자아 |
| 자. 표출된 행위(behavior) | |

- ① 가, 다, 라, 사
- ② 가, 다, 마, 바
- ③ 다, 마, 사, 아
- ④ 다, 마, 사, 자

【해설】 현상학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 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내세우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거부한 비판이론이다.

가, 다, 마, 사, 아 [O] 현상학은 인간을 자발적·능동적 자아로 인식하고, 상호주관성과 감정이입, 행위(action) 중시, 인본주의, 반실증주의와 철학적 연구방법론, 개별 사례 중심적 방법을 추구한다.

나, 라, 바, 자 [X] 행태주의 접근방법의 주요 특성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72

▶ ③

10 다음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최저임금제	나. 항공노선 배정
다. 신공항건설	라. 실업수당

	가	나	다	라
①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보호적규제정책
③	보호적규제정책	경쟁적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

- 【해설】 가. **[최저임금제 - 보호적 규제정책]** :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이다. 소비자 보호법, 산업안전법, 최저임금제 등이 대표적이다.
- 나. **[항공노선 배정 - 경쟁적 규제정책]** : 많은 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항공노선 배정외에도 방송국 설립인가 등이 있다.
- 다. **[신공항건설 - 분배정책]** :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이다. 신공항·항만·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제공이 대표적이다.
- 라. **[실업수당 - 재분배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각종 사회보장책의 마련, 누진소득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summary |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예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예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예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예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 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예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예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예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11 Porter와 Lawler의 성과(업적)-만족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가. 직무성과는 내재적·외재적 보상을 가져오며, 이 관계는 불완전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나. 내재적·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 외재적 보상은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보상으로 보수·승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근무환경·안전 등이 포함된다.
 마.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나, 라 ④ 다, 라, 마

【해설】 가 [○] 직무성과(직무성취)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제로 있어서 직무성과와 보상은 불완전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재적 보상의 결정은 직무성과 외에 다른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직무성과와 보상의 연결은 불완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나 [○] 노력에 의한 직무성과는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직무성과가 만족을 주는 힘은 거기에 결부되는 내재적 및 외재적 보상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 때에 보상은 공평하다고 지각되는 것이라야 한다. 즉 내재적 및 외재적 보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지각되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다 [○] 외재적 보상은 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보상이며, 그 예로 보수, 승진, 지위, 안전 등을 들 수 있다.

라 [×] 내재적 보상은 높은 직무성과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이며, 직무자체에 느끼는 성취감 등이 내재적 보상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마 [×] 개인은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 뿐만 아니라 그가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보상의 양도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 올바른 지문

라. 내재적 보상은 직무성과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얻는 보상으로 직무자체에 느끼는 성취감 등이 포함된다.

마.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 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도 만족에 영향을 준다.

1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 ③ 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 【해설】 ① [X]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 된 정도를 말한다.
- ② [X] 성숙효과는 내적 타당도의 저하요인이다.
- ③ [X] 호돈효과(Hawthorne effect)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 함으로써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다. 지문은 크리밍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 ④ [O]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4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 ② 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 ③ 크리밍 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96, 299

▶ ④

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 【해설】 ① [O]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측정 가능한 '산출물 단위'로 나타내어진다.
- ② [O]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③ [O]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X]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들을 가진 프로그램들만이 비교될 수 있다.

summary | 비용편익분석 VS 비용효과분석

구 분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가치 산정방식	• 비용·편익 모두 금전적(화폐적) 가치로 산정	• 비용은 금전적(화폐적) 가치로 산정 • 효과는 산출물 단위로 산정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
성 격	• 양적 분석(공공부문 적용에 한계) • 형평성·주관적 가치문제 다루지 못함	• 질적 분석(공공부문 적용에 적합) • 외부효과, 무형적·질적 가치 분석에 적합
중 점	•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	• 기술적 합리성(정책대안의 효과성에 초점)을 강조
비용·효과의 변동여부	• 비용과 편익이 함께 변동 (가변비용, 가변편익)	어느 한 쪽이 고정되어야 함. • 비용고정 - 효과극대화 • 효과고정 - 비용최소화
예	• 수력발전, 관개, 교통, 인력개발, 도시개발 등의 영역	• 국방, 경찰, 운수, 보건 등의 영역

▶ 올바른 지문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인 경우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46

▶ ④

| 개념 |

14 아래에 제시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제성 있는 선호'란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유동적 참여'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해설】 가 [X] 불명확한 기술(불명확한 인과관계)이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문제에 대하여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최적의 수단을 모르는 것이다.
 나 [O]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 참여자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또는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알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참여자들의 선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다 [O] '유동적 참여'란 문제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라 [X]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 기회(의사결정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등 네 가지의 흐름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점화계기에 의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올바른 지문

가.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요소로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들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점화계기에 의해 결합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0, 261



| 말 바꾸기 |

15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② 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 ③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④ 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해설】 ① [X]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에 해당한다.
 ②, ③, ④ [O] 드로(Dror)는 최적모형에서 상위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초
 정책결정단계)를 가치의 처리, 현실의 처리, 문제의 처리, 자원의 조사·처리·개발,
 결정시스템 설계·평가·재설계, 문제·가치·자원의 할당,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등의 7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 후정책결정단계(post policy making)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8



| 말 바꾸기 + 개념 |

16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 ④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해설】 ① [O] 정책딜레마는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상
 충적·단절적이어서 상호절충이 불가능 하며, 각 대안들의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
 발생한다.
 ② [O] 갈등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한 경우 딜레마가 증폭된다.
 ③ [X]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할 경우 딜레마가 증폭되는 것
 이 아니라 갈등당사자들이 정책대안의 지연이나 회피를 용납하지 않을 때, 딜레마
 의 상황이 증폭된다.
 ④ [O] 정책문제의 재규정, 스톱고 정책 채택, 상충되는 정책대안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 등이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 올바른 지문

③ 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66



1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 ②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 ④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해설】 ③ [X]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일선관료들은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결여되어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 올바른 지문

③ 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76

▶ ③

18 아래에 제시된 조직구조 특성 중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가. 분업적 과제 | 나. 성과측정이 용이 |
| 다. 넓은 직무 범위 | 라. 표준 운영절차 |
| 마.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바. 예측가능성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나, 라, 마, 바 [X] 기계적 구조의 특성에 해당한다.
다 [O] 유기적 구조는 넓은 직무 범위의 특성을 갖는다.

summary | 기계적 구조 VS 유기적 구조

분 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점	• 예측가능성	• 적응성
조직 특성	• 계층제 • 좁은 직무 범위 • 표준운영절차 • 분명한 책임 관계 • 공식적/물인간적 대면 관계	• 채널의 분화 • 넓은 직무 범위 • 적은 규칙/절차 • 모호한 책임 관계 • 비공식적/인간적 대면관계
상황 조건	•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적 과제 • 단순한 과제 • 성과 측정이 가능 • 금전적 동기부여 • 권위의 정당성 확보	•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분업이 어려운 과제 • 복합적 과제 • 성과 측정이 어려움 • 복합적 동기부여 • 도전 받는 권위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23

▶ ①

19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 ④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 【해설】 ① [X] 기능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수평구조(팀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기능구조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 ④ 네트워크 조직은 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24~328

▶ ②

20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 ②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 ③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분류했다.
- ④ 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 【해설】 ① [X]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X] 맥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앨더퍼의 ERG 이론은 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 ②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 ③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분류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93~400

▶ ④

21 직위분류제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나.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직군(group)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라.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나 [X] 직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렬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다 [X]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이란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summary | 직위분류제의 용어

구 분	내 용	예 시
직위 (position)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OO 담당
직급 (class)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행정 9급, 세무 9급
등급 (grade)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9급 서기보
직류 (sub-series)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행정직렬 내 일반행정 직류와 재정직류
직렬 (series)	•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행정직군 내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직군 (group)	•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 올바른 지문

나.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물론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집단

다.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묶은 것

| 말 바꾸기 |

22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 ③ 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 ④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해설】 ② [X]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다(민영화 수단×).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84

▶ ②

| 말 바꾸기 |

23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가. 구조적 상황론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 나.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이다.
- 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마.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마
-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해설】 가 [O] 구조적 상황론은 환경에 대한 결정론으로 관리자의 역할은 수동적이다.
나 [O]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으로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다 [O]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라 [X]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해 거래의 내부화(조직화)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마 [O] 전략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환경 변수보다는 재량을 지닌 관리자(정책결정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 올바른 지문

라.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②

| 개념 |

24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 한다.
-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해설】 ③ [X] 허쉬만이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던 유형은 외부주도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의 주도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이다.

▶ 올바른 지문

- ③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09~215

▶ ③

| 말 바꾸기 + 개념 |

25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공공서비스의 성과지표와 산출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과지표	경찰부서의 산출방법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및 차량 규모
과 정	A
산 출	B
결 과	C
영 향	D

가. 범죄율 감소

나. 범인 체포 건수

다. 담당 사건 수

라. 지역사회 안전성

① A-다, B-가, C-라, D-나

② A-다, B-라, C-나, D-가

③ A-다, B-나, C-라, D-가

④ A-다, B-나, C-가, D-라

【해설】 ④ [O] A(과정 : 업무처리과정) - 다, B(산출, 직접적인 생산물) - 나, C(결과 :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환경에서 직접적인 변화) - 가, D(영향 : 사업의 궁극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 - 라

성과지표	경찰부서의 산출방법
투 입	조사활동에 투입된 경찰 및 차량 규모
과 정	A - 다. 담당 사건 수
산 출	B - 나. 범인 체포 건수
결 과	C - 가. 범죄율 감소
영 향	D - 라. 지역사회 안정성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2

▶ ④

2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는 직무수행실적과 개인의 능력 외에 태도도 포함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에 용이하다.
 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라.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는 금지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O] 근무성적평정의 요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외에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평가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 나 [X]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는 어렵다.
 다 [X]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해 평정의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행태기준 척도법 또는 행태관찰 척도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O] 평정오류 중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등의 분포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배분법이 활용될 수 있다.
 마 [X]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바 [X] 근무성적평정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피평가자의 동기 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 노력 촉진 등 적극적·발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전협의 등이 진행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올바른 지문

- 나.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 간 비교는 어렵다.
 다. 행태기준 척도법(또는 행태관찰 척도법)은 과학적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평정의 결과가 점수로 환산된다.
 마. 우리나라는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정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 의견교환 등이 필요하다.

| 개념 |

27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총계주의 원칙
-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해설】 ② [O]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재정법」 제17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02

▶ ②

| 개념 + 말 바꾸기 |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 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해설】 ① [O]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공직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
② [X]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
③ [O]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O] 인재 채용 시 학력과 연령의 제한은 젊은 나이에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근무케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57

▶ ②

29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 ②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 ③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 ④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설】 ① [×] 독립합의형(위원회형)은 중앙인사기관이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체로 구성되는 형태이다. 독립합의형은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 올바른 지문

- ①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단점은 의사결정의 지연에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70

▶ ①

30

직무평가 기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등급기준표와의 비교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해설】 가 [O] 분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비계량적인 평가법이다.
 나 [×] 요소비교법은 대표 기준직무와 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분석하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계량적 평가법이다.
 다 [O] 서열법은 직무 전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직무의 우열을 정하는 방법으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비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비계량적, 점수법은 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summary | 직무평가 방법의 비교

비교기준	직무평가의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사용빈도	가장 적음.	둘째나 셋째	가장 많음.	둘째나 셋째
비교방법	직무와 직무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직무
특 징	서열을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치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요소별 배점	대표 직위의 선정과 요소별 보수액 배분
평가방법	비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평가대상	직무 전체	직무 전체	직무의 평가요소	직무의 평가요소

▶ 올바른 지문

나. 요소비교법은 대표적인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직무를 비교하는 계량적 평가법이다.
 라.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비계량적, 점수법은 계량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81, 482

▶ ④

| 법령 문제 + 말 바꾸기 |

31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해설】 ① [X]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② [X]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X]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올바른 지문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 「공직자윤리법」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5년간 속해있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59~562

▶ ④

3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④ 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해설】 ② [X] 중층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구조이다. 중층제는 기초지방정부에 대해 지역 사정에 밝은 상급지방정부가 일차적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summary | 중층제 VS 단층제

구 분	중층제	단층제
장 점	• 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을 가능케 함. •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국가의 직접개입 차단) •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보완	• 신속한 행정을 도모 • 이중행정과 감독의 폐해 방지 • 행정낭비 제거와 효율성 도모 • 지방의 특수성·개별성 고려에 유리 • 행정책임의 명확화
단 점	• 이중행정의 폐단 • 행정책임의 모호성 • 행정지체와 낭비로 인한 불합리성 • 지역적 특성을 도외시킬 가능성 • 주민의 의사전달과 중앙행정의 침투가 왜곡·저해될 우려	• 넓은 국토, 많은 인구에 적용이 불리함. • 중앙집권화로 호를 가능성 • 중앙정부의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 광역행정사무 처리의 어려움.

▶ 올바른 지문

②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원활하게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03

▶ ②

33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 ③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해설】 ④ [X]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정부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말한다.

summary |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을 위한 장치

구 분	기 간	국회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현재 우리나라, 독일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우리나라 제1공화국, 프랑스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 올바른 지문

- ④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21

▶ ④

| 법령 문제 |

3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 ②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 ③ 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 ④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해설】 ① [X]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자원배분과 부처 자율을 결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상향적 예산편성과는 달리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이것은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강화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05

▶ ①

| 제도 및 이론비교 + 말 바꾸기 |

35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 ②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③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④ [X] 무상거래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 되지 않으며,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된다.

summary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 수불의 측면	쌍방 흐름(이원거래 개념) 측면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현금의 수취·지출	수익의 획득/비용의 발생
선급비용·선급수익	수익·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금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 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 올바른 지문

- ④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76

▶ ④

| 내용 분류 |

36 다음의 예산집행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 중 신축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예산의 재배정	나. 총액계상예산
다. 예산의 전용	라. 계속비
마. 총사업비 관리	바. 예비타당성 조사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마, 바 [X] 예산의 재배정,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집행의 재정통제 제도에 해당한다.

나, 다, 라 [O] 총액계상예산, 예산의 전용,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이다.

summary | 신축성 확보방안

이 용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필요)
전 용	행정과목(세항·목) 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 체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이 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초과지출 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계속비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 가능)
국고채무 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수입대체경비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능한 경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의 변경
총액계상예산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60~668

▶ ③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 ③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에 참여한다.

- 【해설】 ①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시(市)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실시하였다.
- ② [O]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 ③ [O]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화되었다.
- ④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가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09

▶ ④

3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해설】 ② [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속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뿐, 주민의 행정참여나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등 주민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 올바른 지문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901

▶ ②

39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법부에 의한 통제
 나.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다. 시민에 의한 통제
 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마.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바.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해설】 가 [X]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외부 - 공식적 통제이다.
 나 [O]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는 내부 - 공식적 통제이다.
 다 [X] 시민에 의한 통제는 외부 - 비공식적 통제이다.
 라 [O]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내부 - 비공식적 통제이다.
 마 [O]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내부 - 공식적 통제이다.
 바 [X]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는 외부 - 공식적 통제이다.

summary | 행정통제의 유형(Gilbert)

구 분	외 부	내 부
공식적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행정감찰관)	-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감사원에 의한 통제 -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
비공식적	- 시민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여론, 매스컴, 인터넷 - 정당	-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4



4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순으로 법제화되었다.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해설】 ① [X]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1999) → 주민투표제(2004) → 주민소송제(2005) → 주민소환제(2007) 순으로 법제화되었다.

- ② [X]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③ [X]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올바른 지문

-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송제 → 주민소환제」 순으로 법제화되었다.
-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